



“4년 연임 개헌 공론화 국정 핵심과제로 검토”

국정위 “개헌은 **李대통령 공약** 시민단체와 정책 간담회 열어 연내 개헌 로드맵 열게 나올 듯 ‘대통령 계엄권 국회에서 통제’ 헌법에 법적 장치 마련도 추진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권력 구조 개편형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국정과제로 포함해 검토 중이며, 6일에는 개헌 운동을 펼쳐온 시민사회 단체와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국민주권 정부’의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이자, 1987년 체제를 넘어서는 개헌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이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국민 통합 개헌을 약속한 바 있고, 당연히 국정과제로 포함해 검토할 사항”이라며 “개헌 운동을 펼쳐온 단체와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월18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개헌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포함하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초안 작성에 착수했다. 조 대변인은 “각 분과에서 145개의 과제를 제안했으며 현재 약 120개로 압축된 상태”라며 “개헌 과제 역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개헌 논의가 국정 동력이 높은 임기 초반에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연내 개헌 로드맵 윤곽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선 당시 공약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립 폐지 △삼수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수사기관장 및 권력기관장 국회 동의를 △지방정부 입법·재정·조직권 부여 등이 포함된다.

최근 논란이 된 비상계엄 발동 권한과 관련해 대통령의 비상명령권·계엄권에 국회 통제 장치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상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취지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도 주요 축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5극 3특 체제’를 기반으로 조광역권 균형발전 구상을 내놨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

서 헌법에 지방정부의 실질 권한을 명시해야만 실효성 있는 분권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결국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개헌 추진이 대통령 본인의 임기 연장 과 맞물릴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개헌은 재임 중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제한을 개정할 경우 해당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헌이 실현되기까지는 절차상 고비도 적지 않다.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고,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초안을 준비할 뿐, 실제 개헌 절차는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거와 연계한 국민투표 실시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도 대선 당시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차기 총선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혜원 기자 hjy@skyedaily.com



21일부터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부가 21일부터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6월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민생 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1차 지급 대상은 전국민으로 기본 15만 원에 소득별 차등 지원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기사 3면> 이종원 기자

反트럼프... 머스크 ‘창당 반란’

美 제3당 ‘아메리카당’ 출범 최측근에서 최대 정적으로 상·하원 10~13석 의석 목표



만 50개주 별로 각각 다른 정당법과 선거법, 기성 정치권의 견제 등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 새로운 전국 정당 설립이란 “세계 최고 부호에

작년 미국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인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당 창당 선언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이 된 모양새다. 머스크는 5일(현지 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아메리카 파티’(미국당)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고자 창당한 다”고 선언했다. 감세와 대규모 지출 계획이 포함된 트럼프 역점 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A)에 반대한 그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통속’으로 미국을 파산으로 몰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부 사항을 밝히진 않았으나 머스크의 전날 게시글에 따르면 “상원 2~3석과 하원 8~10석에 집중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논쟁적 법안들에 (가부) 결정할 표들로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며 캐스팅보트 역할이 목표임을 시사했다. 하지

만 50개주 별로 각각 다른 정당법과 선거법, 기성 정치권의 견제 등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 새로운 전국 정당 설립이란 “세계 최고 부호에 게조차 베푼 일일 수 있다”고 미 CBS방송이 전했다. 선거전문가 브렛 카펠 역시 “모든 주의 법 자체가 양대 정당에 유리하다. 제3당을 통해 “오늘 ‘아메리카 파티’(미국당)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고자 창당한 다”고 선언했다. 감세와 대규모 지출 계획이 포함된 트럼프 역점 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A)에 반대한 그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통속’으로 미국을 파산으로 몰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부 사항을 밝히진 않았으나 머스크의 전날 게시글에 따르면 “상원 2~3석과 하원 8~10석에 집중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논쟁적 법안들에 (가부) 결정할 표들로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며 캐스팅보트 역할이 목표임을 시사했다. 하지

연방제 국가 특성상 미국에선 주마다 정당 설립과 선거 출마 요건이 다르다. 막대한 수의 유권자들 서명을 받아야만 정당 등록이 가능한 곳도 있다. CBS는 “늑

사업자 대출 악용 꼼수 꼼짝 마 집 구매 드러나면 전액 회수키로

국세청선 매입자금 출처 추적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한 정부가 사업자 대출을 악용한 주택 매수도 차단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 대출을 전수조사하고, 국토교통부는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와 주택 거래를 분석하고, 국세청은 고액 주택 매수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따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홈비iting에서 권대영 금융위원

회 사무처장을 언급하며 “이 분이 그 분이군요,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이라며 “아주 잘하셨어요”라고 말했다. 6·27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던 금융위는 권 사무처장 주재로 3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 대출과 이상 거래를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6면>

금융원은 이달까지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서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찾아낼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 원)를 피하

기 위해 사업자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수하는 꼼수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대출이 적발되면 1년 동안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고 2차 적발시 5년 동안 신규 대출이 금지된다.

국토부는 실거래를 분석해서 편법 증여와 허위 계약 등을 확인한다. 위법이 발견되면 국토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부모에게서 주택 구입 자금을 편법으로 받았는지 조사한다. 정부는 집값이 더 오르면 시장 상황을 따라 대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이진주 기자 sjlee@skyedaily.com

다 쓴 글도 다시 보자

박병연 지음 | 138쪽 | 20,000원 | 국문본문판

25년 경력의 일간지 교열기자가 말하는 글씨 고치고 다듬는 기법 공유

군더더기 없고 쉽게 읽히는 간결한 문장
에세이 읽을 때와 비슷한 속도와 난이도
애매한 ‘어문 법’ 익히고 싶은 분에게 추천

다 쓴 글도

다 시 보자

단순히 말을 문자로 옮기면 글이 된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글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말에 ‘듣는 이(聽者)’가 있듯이 글에도 ‘읽는 이(讀者)’가 있다. 혼잣말을 듣는 이는 자신이며 일기를 읽는 이 역시 자신이다. 실언(失言)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실문(失文) 역시 부끄러워해야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면 쓰는 글이 좋아야 읽는 이의 평도 좋을 것이다.

-서문에서